

사설

진료확인서 위조, 요령 아닌 범죄

최근 국제캠에서 일부 학생들이 진료확인서를 조작해 병결 신청에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우리신문에서 입수한 파일에 따르면 병원 명의와 직인이 포함된 양식에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쉽게 위조가 가능했다. 해당 파일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요령'처럼 공유되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다. 병원의 명의와 직인을 도용해 문서를 조작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이를 실제 병결 신청 증빙자료로 사용했다면 '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 '사문서행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범죄다.

그럼에도 학생들 사이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찾아볼 수 없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학교 커

뮤니티에서 직접 유포된 정황은 찾을 수 없었지만, 진료확인서 파일은 마치 '족보'처럼 학생들 사이를 떠돌고 있었다. 해당 파일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진료확인서 위조를 결석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고 있다.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파일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이를 접하는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잘못된 행위는 관행으로 자리잡는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신뢰를 전제로 한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 반복되는 일탈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선 안 되는 이유다.

공결 제도는 불가피하게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의 사정을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운영된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증빙서류의 검토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검증 절차는 복잡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은 결국 전체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질병으로 공결이 필요한 학생들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예상 못 할 상황이 아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비단 진료확인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시험 기간마다 성행하는 족보 판매,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교재 PDF의 불법 유통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를 '편의'라는 이름 아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위법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물론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병결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 매뉴얼을 도입하거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 역시 위조 파일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로도 구성원의 정당한 인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모든 위반을 감시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구성원 각자의 태도가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행위에 대한 자각이다. 편의라는 핑계가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어떻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이 아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윤리를 배우는 공간이다. 그 출발점은 규율이나 제도보다도 구성원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진료확인서 위조는 '결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 역시 위조 파일 남용을 방지하는

세시봉

무임승차 끝?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을 한정해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공공·농업·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운영 중이다.

제도가 지적받기 시작한 건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때문이다. 제도가 도입됐던 1984년엔 노인 인구가 4%였지만, 지난해는 1,050만 명으로 20%를 넘어섰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부담만으로 기록한 손실은 역대 최대인 7,754억 원이다. 적자 해소를 위해 2023년 10월과 2025년 6월에는 각각 150원씩 지하철 요금을 올리기도 했다. 지금처럼 무임승차 제도를 그대로 두고 운임만 올리면 다른 세대의 불만이 생길 것이다.

제도 개편에 의견은 엇갈린다. '너희는 평생 늙지 않을 것 같냐'는 반발과 함께 야당에선 노인 차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지하철 인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역대 최대의 도시철도 운영 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해 두 차례 오른 지하철 요금 역시 근거가 된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들을 차별하고 싶은 게 아니다. 20대든 노인이든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할 시민이다. 여러 시각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세대 갈등 프레임에만 가두는 것은 상식적인 접근법이 아니다.

어느 문제나 그렇듯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이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거나 무료가 아닌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차별이 아닌 시대에 맞는 융통성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외모 불안에서 외모정병까지

외모 불안을 유통하는 방식

서민주 기자
smj13221@khu.ac.kr



"정보 주세요."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기면 몇 초 뒤 자동 메시지로 시술 정보가 도착한다. 기자 역시 SNS를 통해 접한 시술 영상을 보고 강남의 한 피부과를 찾은 적이 있다. 영상 속에선 단 한 번의 시술로 얼굴형 전체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체감한 변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내가 본 건 일종의 광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경험은 기자만의 일이 아니다.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외모정병'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정도로 외모 불안은 친구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됐다.

SNS에서는 성형·시술 전후 비교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타인

의 변화된 모습을 기준 삼아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SNS에서 특정 시술이 유행할 때마다 성형외과 예약 대기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실제로 강남의 한 유명 병원은 상담 예약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밀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외모 관리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출발점이 '비교'와 '불안'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SNS를 통해 형성된 기준은 계속해서 변하고 그 기준에 맞추려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타인에게 있을 때, 그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되는 환경 속에서 필요한 것은 외부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일지도 모른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개인의 몫으로만 환원될 문제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비교를 반복하게 만드는 환경과 기준이 형성되는 구조 역시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만평 타인과의 비교로 커져가는 불안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